

“오염수 방류 세계 바다에 심각한 위협”

민주 저지대책위 외신기자 간담회 “방류 책임 없다는 게 IAEA 입장” 밤샘 농성·결의대회·입법 저지 나서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저지하기 위해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직접 여론전에 나서는가 하면, 오염수 방류 반대 목소리 결집을 위해 국회에서 밤샘 철야 농성도 할 예정이다.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대책위원회’ (대책위)는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 간담회를 하고 오염수 방류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대책위원장인 위성곤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사고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는 전 세계 바다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로, 현재 대와 미래 세대의 건강과 생명에 치명적 영향을 끼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말했다.

위 의원은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종합보고서에 대해 “다핵종저체제설비(ALPS)에 대한 성능 검증, 오염수에 얼마나 많은 방사성 핵종이 들어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빠졌다”며 “IAEA 보고서는 오염수 해양 투기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IAEA의 보고서 내용을 존중한다는 정부·여당의 태도에 대한 비난도 이어갔다.

박성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핵 폐수 방류가 오롯이 일본의 결정인 만큼 자신들은 아무 책임이 없다는 게 IAEA의 입장”이라며 “부실한 실험 결과를 토대로 쓰인 맹탕 보고서를 왜 우리가 믿고 방류를 용인해줘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보고서에 결함이 차고 넘치는데 (그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저지대책위 외신기자 간담회

일시 | 2023년 7월 6일(목) 11:00 장소 |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



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저지대책위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우원식 고문이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 자문기관이 제시한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5가지 방안

내용을) 믿으라고만 하는 정부·여당의 행태는 잘 못된 신앙처럼 보인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국민적 여론이 높은 만큼 ‘비상 행동’을 통해 정부를 향해 일본에 이런 여론을 분명하게 전하고, 방류 중단을 요구하라고 지속해서 압박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이날 오후 7시부터 이튿날인 7일 오전까지 국회 본청에 당 소속 의원 전원이 모여 1박 2일 밤샘 철야 농성에 돌입한다.

7일 오전에는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의원들과 지역위원장, 당직자, 보좌진 등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오염수 투기 반대 촉구 결의대회’를 연다.

이와 함께 실제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뒤 여민들

비슷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 작업도 준비 중이다.

윤준병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안전성을 제대로 검증받기 전 일본이 독단적으로 오염수를 투기한다면 우리 정부는 즉각 일본산 수산물 전체의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관련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등은 (오염수) 방류를 막는 활동보다는 뒷수위”라며 “독립적인 특별법으로 제정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부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이낙연, 문 전 대통령과 막걸리 만찬

“이재명 회동 일정 조정 중”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5일 경남 봉하마을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데 이어 양산 평산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지난달 24일 귀국한 뒤 이어온 ‘귀국 신고’ 행보의 일환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평산마을 사저에서 문 전 대통령과 약 40분동안 환담하고, 사저 앞 식당에서 약 1시간 20분간 막걸리를 곁들인 만찬을 했다. 이 전 대표의 부인 김숙희 여사와 최측근인 윤영찬 의원도 동행했다.

이 전 대표는 예방 후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통령의 별도 당부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있었지만,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후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문(전) 대통령님은 나라 걱정, 민주당 걱정을 포함해 여러 말씀을 나눴다”고 적었다.

만찬에는 문 전 대통령이 막걸리 애호가인 이 전 대표를 위해 마련한 ‘금정산성’ 막걸리 5병이 올랐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이재명 대표와 회동 시점을 묻는 질문에 “일정을 조정하고 있을 것”이라며 “정치인들이 말하는 줄다리기가 있지는 않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다른 곳에) 더 인사를 드리 다음 벌는 걸로 얘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여의도 브리핑

이병훈 “식품업소 열음 위생 기준 재검토해야”

더불어민주당 이병훈(동남을) 국회의원은 6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제공되는 열음이 포장 판매되는 식용열음보다 완화된 위생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이 기준이 과학적, 합리적인 재검토하고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이병훈 의원에게 제출한 입법조사회답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식용열음과 식품접객업소에서 제공하는 열음의 이화학적 기준은 같지만, 식품접객업소에서 제공하는 열음의 경우 식용열음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식품접객업소용 열음의 위생 기준을 완화할 때 과학적 근거가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정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같은 기간에 식약처가 식품접객업소용 열음을 수거해 검사한 건수는 연간 평균 350개 매장으로 검사 건수가 한정되어 있어 식

중독 원인 규명을 위한 충분한 건수가 확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최근 들어 소규모 카페, 식당 등이 급증하고 있어 식약처의 한정된 관리·감독 인원으로는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고, 식약처의 주장과 달리 1999년 미국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열음에 의한 집단 식중독이 발생할 사례가 보고된 바 있어 식중독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한 위생관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병훈 의원은 “식약처는 소비자의 위생과 안전을 위해 과학적 기준 제시 없이 완화된 열음의 위생 기준을 재검토하고, 미국, 일본, 유럽 등의 선진국 수준으로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민주 혁신위 “당 오합지졸 콩가루 집안” 작심 비판

김은경 위원장 “자기정치 급급”

불체포특권 포기 하지부지 불만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6일 당을 향해 “오합지졸 콩가루 집안”, “자기 정치만 하다 자중지란” 등 고강도 비판을 쏟아냈다.

1호 혁신안으로 내놓은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이 당내 공론화는커녕 사실상 흐지부지된 것으로 보고 불만을 여과 없이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꿈수탈당 금지’ 등 추가로 내놓은 혁신안이 탄력받도록 하기 위해선 일찌감치 당과 기싸움에서 우위에 서야 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도 읽힌다.

김은경 위원장은 이날 오전 중앙당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일부 당 인사들이 탈당, 신당, 분당 등을 언급하며 당의 분열을 조장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당과 대한민국의 운명보다는 자기 정치에 급한 나머지 자중지란의 모습을 보이는 것

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일부 의원은 입법기관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고 본회의장에서 안이하고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 구실에 오르는 일도 발생했다”며 “혁신위 역할은 바로 여기에 있다. 민심과 유리된 민주당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고 그 괴리와 격차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혁명보다 어려운 것이 개혁이나 혁신이라고 한다. 국민이 무섭게 심판하기 전에 혁신위가 먼저 매를 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이크를 잡은 서복경 위원의 발언은 더 강했다. 서 의원은 “김 위원장은 우아하게 둘러서 말했는데 나는 꼭 집어서 말하겠다”며 최근 본회의장에서 ‘일본 여행 문자’ 논란을 빚은 김영주 의원(국회 부의장)을 향해 “사과하기까지 며칠이나 걸릴 일이었는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쓰아붙였다.

그는 또 “송영길 전 대표는 검찰과의 싸움은 법

정에서 하라”며 “어쨌거나 그 일(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로 당은 굉장한 위기를 겪고 있다. 조율되지 않은 말로 당 내외에 혼란을 초래하지 말고 자중하라”고 경고했다.

이어 최근 분당 가능성을 언급한 이상민 의원에게는 “열집 불구경하는 것인가. 말씀을 조심해 줬으면 한다”면서 “이처럼 기강이나 기율이 없는 조직은 민주적인 조직이 아닌 오합지졸 콩가루 집안”이라고도 쓰아붙였다.

위원들은 또 당이 혁신위 1호 혁신안을 사실상 무시하고 있다며 지도부에 당내 공론화를 통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기도 했다.

윤형중 의원은 “혁신위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자고 제안한 것은 지금의 검찰권 행사가 정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다”라며 “지금 국민 눈높이에는 갈을 든 검찰이나 철갑을 두른 민주당이나 똑같아 보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군소의대 중심 정원 확대는 수도권만 수혜”

김원이 의원 전남권 의대 신설 촉구

최근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정원 50명 미만의 ‘군소의대’ 위주로 정원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의료취약지역 전남지역의 국립 의대 신설과 부속병원 건립 등 보다 장기적인 대책과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목포) 국회의원이 교육부와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내 의대 40곳 중 정원 50명 미만인 곳은 총 17곳(42.5%)이다. 서울아산병원과 연계한 울산 의대(40명), 삼성서울병원과 연계한 성균관 의대(40명)를 비롯해 아주의대(40명), 인하의대(49명) 등이 이른바 ‘군소의대’에 속한다.

의료계는 군소의대 중에서 ‘빅5병원’(서울대·서울아산·삼성서울·서울성모·신촌세브란스병원)과 연계된 곳이다. 1000병상 이상의 상급종합병원을 소유한 곳은 의대 정원이 늘어도 충분히 수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존의 의사양성 인프라

를 이용해 교육수련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논리다.

문제는 정원 50명 미만의 대만 정원을 늘릴 경우 호남권(광주·전북·전남)이 배제된다는 점이다. 광주 전남의대(125명)와 조선의대(125명)가 있지만 시군단위나 섬지역 등에는 의사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전남지역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곳이다.

김원이 의원은 “앞으로 늘어날 의대정원을 50명 미만 의대에만 배정한다면, 가장 수혜를 보는 곳은 결국 ‘빅5병원’과 수도권 대학병원이 될 것”이라며 “이는 의료격차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가의 책무를 망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남권에 국립의대를 신설하고 부속병원을 함께 설립하는 등 지방의료 확충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



한사람의 보험비용이
전국민의 경제부담

제안하면 거절하고!

발견하면 신고하고!

보험사기 ZERO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

경찰청

금융감독원

h-well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IAA 한국보험대리점협회